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내년 액비유통 '급물살' 탄다

농림부가 내년부터 품질 좋은 액비 유통을 위해 액비살포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저장조 설치비용 등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24일 자연순환농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액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액비유통센터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올해 우선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 내년에 개소당 8천만원의 추가장비 구입자금 지원과 액비저장조도 5개소를 선정, 개소당 8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액비 유통 민간업체 육성 차원에서 처방서 발급 등 액비살포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되, 민간업체 참여 기준은 전년도 살포 실적 2백ha 이상, 액비저장조(2백톤 기준) 20개 이상을 책임지고 액비 품질 및 저장조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반면 액비유통센터 지정 이후 장비 관리가 부실하거나 살포 실적이 부진한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차년도 액비 살포비 지원 및 우수 액비유통센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인센티브 시행 등으로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어 액비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인센티브 대상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경진대회·우수브랜드 '인증통합' 찬반 논란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와 우수브랜드 인증과의 통합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25일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브랜드 인증 통합 관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통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부가 지난 2월 '축산물브랜드장기발전계획'에 내년부터 경진대회와 인증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통합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금년 축산물브랜드전을 계기로 다시 거론되자 농림부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열린 것.

경진대회와 인증을 통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목적이나 대상, 평가기준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우수 브랜드를 생산토록 하는 동기부여는 그 이상 없을 것이라며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설문조사 결과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짓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ACCP기준원 업무 돌입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박형근)이 지난 10월 18일자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데 이어 24일에는 정부로부터 HACCP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기준원의 조직은 평가국과 관리국으로 나뉘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어져 있는데 평가국에는 개발팀, 농장팀, 사료팀, 가공팀, 유통팀이 있고, 관리국에는 총무팀, 교육홍보팀 등 총 2국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교우유급식 연찬회 지역별 확대를

학교우유급식 연찬회가 학교 우유 급식 확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연찬회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낙농진흥회가 주관한 '전국학교우유급식 관계자 합동연찬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행정기관 및 각 교육청 등 우유급식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8%가 업무에 연찬회가 학교 우유 급식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또 학교우유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우유급식 장애요인이 산재돼 있어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시도의 학교우유급식 사례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 일선 행정기관과 교육청 관계자가 우유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번 연찬회 설문 조사에서 지역별 연찬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5%를 차지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학교장 43.7%, 우유급식 담당자 33.0%, 일반 학부모 18.8%, 학교운영위원 4.5%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연찬회를 통해 우유급식의 두 축

인 시군과 교육청 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됐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던 학부모이카데미, 학교우유급식 특별강의, 낙농체험 현장학습 등 우유급식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향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회'를 통해 시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007년도 학교우유급식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국산 젖소정액' 우수성 입증

농협 젖소종모우 딸 소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2년 연속 그랜드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쾌거를 올려 앞으로 국산정액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3일 농협 젖소개량부(부장 오규락)에 따르면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가 지난 18일·19일 양일동안 개최한 2006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본지 2056호 1면, 10~11면 화보·스케치 참조)에서 그랜드챔피언을 차지한 파주시 앞동산목장(대표 이응기) '앞동산 디사이퍼 236호'는 농협종모우 'H-277 디사이퍼'의 딸 소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젖소는 산유능력이 3백5일보정 1산차 7천3백64kg, 2산차 1만6백86kg에 달할 정도로 우수하고, 유방부위·강건성·예각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젖소는 어미 '앞동산 125호'가 2001년 8월25일 정액 H-277을 수정 받아 2002년 6월 2일 출생하여 서울우유 서부지도소를 통해 농협 젖소개량부가 실시하는 젖소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열린 2005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농협젓소종모우 제주도(H-948)의 딸 소가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차지하여 2년연속 그랜드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다.

농협종모우 딸 소들은 올해 그랜드챔피언 외에 육성우·미경산우 부문에서 5두가 상위 입상했으며, 경산우 부문에서도 5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림에 따라 한 국형 젓소종모우의 우수성이 확고히 입증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 농지법 개정 전향적 검토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10월 18일 미국축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왔지만 우리 정부입장은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에 축산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국장은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취임 후 처음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지법 문제는 타 법과의 관계와 법 체제 문제 등을 고려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로 친환경축산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건교부와 농림부 입장을 모두 수용기로 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도 밝혔다.

■ '농지내 축사 진입' 농지법 개정안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 결과에 축산인들의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함으로써 농지에 축산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

정안을 조일현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홍상 연구위원에 '농지의 정의 개선 및 식량위기사 농지활용방안'이란 주제의 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22일 나올 계획으로 축산인들은 용역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질 지 눈과 귀를 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농지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 결과를 지켜 본 후 다시 심의기로 하고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로 더욱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도 쌀과 같이 식량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하게 되면 농지를 영원히 농지로서 보전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농지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의 황폐화와 타용도로의 전환이 늘어나 오히려 농지는 줄어들어 식량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농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용역 결과에 반드시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벧짚암모니아처리사업 내년 3월까지 지원

축산농가의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벧짚암모니아처리사업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강두승)는 전국 시군에서 벧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암모니아가스 및 가스처리용 비닐을 공급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참여신청을 하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농협은 특히 전년대비 원유, 나프타, 에틸렌 등 원자재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지만 암모니아 가스는 1%, 비닐은 0.1~0.4%의 소폭 인상된 가격에 공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가스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가격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의 40% 보조 지원한다.

또한 농협은 봄철에 공급된 총채보리와 같이 생벼집근포사일리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협 자체 무이자자금으로 유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 신경분리 탄력 조정방안 검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0월 13일 “농협 신경분리의 시행시기 및 방법은 경제사업 독자생존 가능성과 자본금 조달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림부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놓고 토론회 등 전문가, 농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부지원 및 법인세 감면 조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효율적인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분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며 “농협법 틀내에서 3개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함을 원칙으로 할 것”임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난 7월부터 실무기획팀을 가동하여 20여 차례의 핵심쟁점사항을 토의하고 있다”면서 “경제사업 독자생존을 위한 수익원 창출 및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필요자본금 추정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및 장단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제시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사천)이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화 방

안’을 주제로 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홍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또는 공동)처리 필요성 △자원화 방법 비교 △외국사례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화 모델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 또는 공동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통해 질소와 인을 제거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제시했다.

또 퇴비화의 경우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수분조절을 위한 첨가제가 필요하며 동력소모가 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설치비가 저렴하고 매우 보편화된 방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간편하며, 퇴비화 기간이 짧고 퇴비의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하여 멀리까지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

액비화는 저비용 자연친화적 비료 생산이 가능하고 전작에 활용이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화 모델에는 △집중형 시설 △무약취·무방류 시스템 △경제성이 있는 시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수거형태 △성분분리 가능 기술 등이 있음을 제안했다.

축사기반시설부담금 즉각 폐기를

한미FTA협상은 물론 날로 불리해지고 있는 축산업경쟁여건을 극복키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국제경쟁 구조개선에 따른 각종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축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축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고 있다.

양축농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백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려면 무려 9백5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탁상공론격인 이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K씨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식 축사를 신축하려 하지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축사신축을 보류한 상태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충북 제천의 또 다른 축산인도 국제경쟁을 위해 축사의 규모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제화 경쟁여건 확보를 오히려 포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즉각 철폐를 주장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로·공원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부담금 면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은 “현행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법안개정을 제출해 놓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쇠고기 둔갑판매 수법 다양화

쇠고기 부정불법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과 전

두수 생산이력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추석을 앞두고 둔갑판매와 원산지허위표시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21·22양일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활동을 펼쳤다. 협회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총 54개소의 판매업소를 조사했으며 7건의 원산지허위표시와 미표시 건수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서 젓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동행한 한우유통감시단 관계자들은 둔갑 판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함께 생산이력제의 조속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찰에 적발된 둔갑판매업소의 경우 젓소와 한우를 섞어 판매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 정확히 몇두를 어떻게 팔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업소에서 섞어 팔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둔갑판매를 자행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단속기준은 세부적이지 못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두수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쇠고기 둔갑판매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美 쇠고기 뼈 조각 허용 요구

미국측이 최근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뼈 조각 포함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침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정추진 상황보고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미국 작업장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확인시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중단을, 뼈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확인시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은 지난 9월 11일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 이후 아직까지 없다.

이는 미국의 관련업계가 뼈조각이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뼈조각 문제 해결전까지 본격적인 선적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주 곳곳 '반FTA 시위' 격렬

지난 10월 23일 제주 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농민, 노동자 1만 5000여명이 참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한·미FTA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한·미FTA반대투쟁에 나선 농민들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각오다.

한농연과 전농 등 한·미FTA농축수산물비대위와 민주노총 등 한미FTA저지범국민 소속단체회원 5000여명은 한·미FTA 4차 협상이 진행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내 곳곳에 결의대회와 국민대회 등을 갖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펼쳤다. 또한 농어민들이 주축이 된 제주도민 1만 여명도 제주생명산업인 감귤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며 저지투쟁에 합세했다.

농민·노동자 등 1만5000여명은 4차 협상

첫날인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갖고 “온 국민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한미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경식 전농의장은 농민대표결의발언을 통해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으면 11월 22일 백만대항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저지투쟁단은 24일과 25일에도 협상장소인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변 곳곳에서 소속단위별로 소규모 집회를 갖고 “제2의 IMF, 한·미FTA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양국은 4차협상에서 농업, 상품, 섬유분과 등 16개 분과와 자동차작업반 등 2개 작업반에 대한 회의를 갖고,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특히 양측은 4차 협상을 통해 각 협상분야별로 핵심쟁점을 제외한 이견 등에 대해 가치치기 작업을 추진했다. 농업분과의 경우 그 동안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농산물특별기금관세(SSG)와 수입쿼터(TRQ)의 기본적 운영방식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도출, 23일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며, 24일부터는 품목별 양허계획(관세철폐 수준 및 철폐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디 커틀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농업”이라고 밝히고, FTA협상과정에 쌀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㉞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